

“전북 특화 재난지원 시스템 마련을”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코로나19·민생 등 현안 정책 질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1년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1일차인 지난 18일 최후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결과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진자 등 민생·기업분야 지원 방책 대책 및 도정 현안을 위한 필수사업이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한 톨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2021년 본예산 심사시 순세계 잉여금 추계 오류를 지적, 그로 인해 부채상환이 가능한 상황에도 오해여 이번 추경에 부채를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 과오를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역 내 소비진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과 관련된 시후 분석이나 평가로 전북도민의 특화된 재

난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 초안에 전북이 제안한 6개 사업중 단 1개사업 전라선 고속화만 반영된 것을 언급하며 “최종 확정인 6월까지 논리를 보강하고, 사측생의 각오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도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조차 어려워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 농촌인력난 해소 대책을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책과 도시의 유류인력 일손 지원사업 등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선제적 활약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는 것을 언급하며 도차원의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위한 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자체부진한 진행상황을 질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용역결과에 따른 대안 모색을 챙기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스마트상점’가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김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은 “전북도의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도시계획사업과 명칭을 변경하고, 과에 청년정책팀을 이관하고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점검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청년정책 예산반영이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을 반문하며, 일자리문제 해결과 농촌에서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등 농촌친화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현 전북경제 위기는 정부에 치우친 정부부지사보다는 경제 문제에 결연 경제부지사가 필요하다”며 6월 말까지 전북도의 가시적인 답변을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재난금 국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전체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새만금청과 지역민의 갈등문제 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북 도민의 희생으로 건설된 용담댐의 현재 배분량과 향후 배분계획을 체크하며 “새만금개발사업 등 우리 지역의 대안위 개발 계획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 예측을 잘하는 등 충청권 추가요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방안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도 정책을 묻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물질 제거된 상태 후 분리배출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원주 소재 (유)휴먼에노스와 전북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식품기업과의 동반 성장 본보기 돼주길”

도의회 농산경위, 원주 소재 휴먼에노스 등서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17일 원주 소재 (유)휴먼에노스와 전북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유)휴먼에노스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추, 양배추, 마늘 등 농산물을 발효시켜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는 건강 기능식품 유통전문회사이다.

기업 현황을 청취한 김철수 위원장(정읍 1)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가 부진한 요즘에 지역 농가와 원료공급 협약을 맺는 등 지역의 농산물 소비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식품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좋은 본보기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 향상,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 기능식품 시장은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D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식품을 개발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도내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가 소득향상 및 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에타면제

전북 몫 4%에 불과”

전북도가 주요 현안 사업 및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대응력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도 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18일 열린 전북도의회 3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심사 정책질의에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된 23개 사업(총 사업비 24.2조)중 전북도 몫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상용차 산업혁신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2천억), 새만금국제공항(8,000억)등 2개사업에 1조원으로, 총예산 24.2조 대비 4.1%에 불과해 전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조, 향후 에타면제를 앞두고 있으며 심수조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전북도였는데, 오히려 각종 사업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도가 요구했던 전주~김천 철도등 주요사업이 배제돼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하며 “이러한 전북출대는 정부와 정치권도 문제지만, 사업발발 및 중요 이슈와 현안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전북도의 문제가 더 많다”고 했다. /유호상 기자

여야, 26일 김오수 청문회 합의

21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여야는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관해 합의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 열기로 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결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추후 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수석은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어서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수석도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美 공식 실무방문… 21일 한미 정상회담

오늘 공식 일정 시작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실무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미 사흘째인 오는 21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현지시각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은 ‘공식실무방문’ 형태로 정해졌다. 공식방문과 실

무방문의 중간 형태로, 의정이 최소화되는 게 특징이다. 김정숙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면 양자 정상회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일리언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를 하는 것으로 방미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에 미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방미 사흘째인 21일 오전 백악관을 방문해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한다. 오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바이

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방미 사흘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이어 조지아 주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한 5G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정수석은 전했다.

이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20일 오후 늦게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뉴시스

환경부, 기후환경부로 명칭 변경 추진

민주 윤준병 의원,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등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은 지난 18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을 기후환경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

로 분산돼 있다”며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향후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후환경부총리가 생기면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이 기후환경부가 어젠다를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그동안 석탄 수출 등의 문제로 기후약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기후환경부총리 신설만으로도 기후환경 관련 한국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대외 평가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법사위원장, 野에 있으면 식물국회”

민주 윤호중 원내대표 “떼쓰기 선 넘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재배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야당이 야당이 있었을 때 국회



는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였다”며 “우리가 야당이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시 예전처럼 국회를 식물국회로 불게진 국회로 만드는 것을 재연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이러 “국민의힘은 지난 보름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했는데 합당한 이유도 없었고 국민에게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국정의 발목을 잡으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며 “그런데 이제 정쟁의 대상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로 바뀌었다. 표적만 바뀌었을 뿐 태도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 청문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의무다. 청문회 요구서도 국회에 송부된 후 20일 이내에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에 연계 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 결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야당도 최소한의 배움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병명 의심되면 '1339'로

“윤석열, 젊은 시절 전투환 떠올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5·18 41주년을 맞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투환 전 대통령에 빗대며 원색 비난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총장과 전투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올린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투환 장군이 떠올랐다”며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고 운을 폈다.

“12·12까지만 해도 전투환 장군이 내겐 ‘꿈꾸지는 않은 듯하다. 그보다는 자신이 꼭꼭이도 사랑하는’ ‘하 나’를 지키기 위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선공을 날렸다고 봐야 한다”며 “(5·17에는) 전투환 장군도 ‘이왕 내친 김에’라는 심정으로 큰 꿈을 꾸다. 슬금슬금 준비해 5·17 피의 학살을 감행했다”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의 시작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검찰



우선 전투환의 12·12와 5·17 쿠데타를 2단계 쿠데타로 지칭하며